

세계가 주목한 가치... 한국선 그냥 '잊혀진 땅'



경인일보 창간 73주년 특별기획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재조명 필요한 그곳

지난 14일 찾은 민간인통제구역(이하 민통선) 안에 위치한 한반도 최북단 역사인 도라산역은 조용했다.

정기적으로 코레일에서 하루에 1차례 운행하고 있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나 차량으로 안보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만 잠시 시끌벅적할 뿐 고요하다. 도라산역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건 역사가 들어있는 위치가 '민간인통제구역 안'이기 때문이다.

도라산역 북쪽으로 차로 5분을 달리면 한국 군인들조차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이하 DMZ·Demilitarized zone)가 나타난다. 일반인들에게 DMZ로 알려져 있는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3년간의 전쟁을 잠시

군인도 함부로 통행 못하는 지역 생태·문화 유적지등 그대로 간직

국민적 관리·보전방안 논의 시급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탄생했다.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한반도에 있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방문할 수 없는 곳이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남과 북으로 2km씩, 동서로 248km에 걸쳐져 있다.

도라산전망대에서 DMZ를 바라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산지와 평지, 습지가 나타난다.

DMZ가 수풀로 우거질 수 있었던 건

갈 수 없는 땅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안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어떤 어류와 조류가 서식하며, 한반도에 터를 잡고 빈만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민족의 흔적인 문화재 등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민통선도 마찬가지다. 민통선 지역에 민간인들이 마을을 조성해 살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되어 가지만 생태와 문화재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잊혀져 있던 땅 DMZ와 민통선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한, 북미간 대화도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민통선엔 안보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DMZ와 민통선에 대해 화해의 시대에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해 나갈지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냉전

시대 서독이 통일 이후 휴전선인 그뤼네스밴트(Grunes Band) 일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연천에서 만난 김학용(64)씨는 "민통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도 필요하지만 잘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취재반

■ 취재반: 김중택 부장(사진부), 김종화 부장(문화체육부), 이준석 기자, 배재흥 기자(이상 사회부)



한반도 핫 플레이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긴장과 통제가 일상이던 DMZ(비무장지대)가 재조명받고 있다. ① 서부전선 DMZ철책선 ② 임진강 철교를 건너고 있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 ③ 도라산 평화공원의 바람개비. /취재반

‘평화시대의 道 정책’ 토론회 19일 개최

경기도는 오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은?’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김진홍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

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나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7명의 전문가가 나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발제자, 제안자,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으로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정성호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최화철기자·편집=김상희기자

한반도 평화시대 ‘경기도 역할’ 모색

19일 道 북부청사서 ‘정책 토론회’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대비해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경기도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은?’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

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 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나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화영 도 연정(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선희기자

한반도 평화시대 道 역할은? 19일 북부청사서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의정부 시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도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진홍 도 행정2부지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진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등 7명의 전문가는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를 천명하고 통일경제특구, DMZ 보전, 환황해경제벨트 등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

남북 평화시대 '경기도 할일' 찾는다

19일 정책 토론회

경기도는 오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은?'을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전대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김진홍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들이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변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초발제,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는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교수, 소성규 대전대 교수, 박영민 대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현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나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말미에는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 형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정성호 국회의원이 새로운 경기위원회 부위원장 좌장으로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평화변영정책 기초를 천명하고 통일경제특구, DMZ보전, 환황해경제벨트 등 도의 주요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점검과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통일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강성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